

왜 200억 들여 '대한제국 영빈관'을 다시 짓나

동서남북



유석재
문화부 차장

은 극진히 확대했으니 미국이 그 직전 일본의 한국 침탈을 용인했다는 사실은 통 모르고 있었다. 엘리스는 “황제다운 존재감 없이 애처롭고 둔감했다”며 고종을 비웃었다. 멸망을 목전에 둔 나라가 펼치던 웃지 못할 외교전이었다.

1897년 대한제국이 ‘황제의 나라’를 내세운 것은 분명 자주(自主)를 표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다. 왕실이 황실로 격상함에 따라 불어난 유지비는 백성들 몫이었다. 황제국 선포 뒤 사실상 새로 지은 덕수궁에는 돈덕전·석조전 같은 장엄한 서양

외세에 의존했던 고종이 세운 호화로운 서양식 건물 ‘돈덕전’ 100년 만에 굳이 새로 만들며 ‘자주 외교’라고 미화하니

식 건물도 신축했다. 같은 임금 때 무리한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의 고통을 뺀 지 불과 29년 뒤 일이었다. 내실을 갖춘 개혁은 ‘제국’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다. 백성들이 오히려 나랏빚을 대신 갚아주는 운동을 벌여야 했던 취약한 나라가 대한제국이었다.

미·영 두 열강의 공판 사이 절묘한 위치에 지은 돈덕전은, 대한제국이 외세에 의지해 연명(延命)을 노린 굴욕적 역사의 상징과도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건물은 오래가지 못했다. 1910년 나라가 망하고 1919년 고종이 승하

한 뒤 더 쓸 일이 없어진 돈덕전은 방치됐고 1920년대에 철거됐다.

사라졌던 돈덕전을 다시 지은 것은 2018년 본격화한 ‘덕수궁 제 모습 찾기’에 따른 것이다. 발굴 조사를 마친 뒤 돈덕전 복원이 시작돼 최근 외부 공사를 끝냈다. 오는 5월 현판식에 이어 9월 개관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복원’이 아니라 ‘재건’이라고 말을 바꿨다. “자료 부족 때문에 원형대로 지을 수 없었고 사진 등을 참고해 새로 만들었다.” 결국 건물의 많은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웠다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해서 문화재적 가치도 의문인 돈덕전을 다시 짓는 이유는 뭘까. 답장 밖 안내판에는 ‘자주 외교를 통한 주권 회복의 장’이었다고 쓰여 있다. 한술 더 떠 문화재청은 “근대화를 향한 대한제국의 못다 이룬 꿈을 재조명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정신 승리’가 진정 우리가 역사에서 얻는 교훈일까. 재건된 돈덕전을 찾을 관람객들은 그 ‘자주 외교’라는 것이 돈덕전 낙성 2년 만에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허울 좋은 간판이었음을 이해해야 맞지 않는가?

돈덕전 재건에 투입된 비용은 약 200억원이다. 과연 그 돈을 들여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권위나 명분, 화려한 외전, 말로만 ‘자주’를 외치는 일 따위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176]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작가인 패니 플래그(Fannie Flagg)의 소설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Fried Green Tomatoes at the Whistle Stop Cafe)’는 1987년 발간 직후 36주 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1991년 영화로도 세계적 히트를 쳤다. 원래 소설의 배경은 앨라배마주의 아이언데일(Irondale) 마을이지만, 영화 제작진은 조지아주의 줄리엣(Juliette)을 로케 장소로 선택했다.

이 마을 입구로 진입하는 순간 보이는 철도와 몇 군데 앤트릭 상점, 과거의 역사(驛舍)는 지금도 마치 영화 세트 같은 느낌을 준다. 1927년 지어져 가족사료와 철물, 약과 자동차용 휘발유를 팔던 잡화점 건물이 영화에서 ‘휘슬 스톱 카페’로 사용된 공간이다. 영화 출시 직후

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도록 이 시골 식당에 전국에서 하루에 수백명, 연간 수만명이 찾아온다. 그야말로 ‘공간력(空間力)’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다.

이 카페의 최고 인기 메뉴는 당연히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다. 하루에 수백개의 토마토를 잘라서 튀긴다고 한다. 영화가 소개되기 전에는 전 세계 사람들, 심지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음식을 몰랐다. 영화의 성공과 함께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레스토랑에 이 메뉴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Midwest) 지방의 음식이다.

남부 지방에 비해 추운 날씨로 첫서리가 올 때까지도 익지 않은 토마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안한 레시피였던



것이다. 명칭 그대로 덜 익은 푸르스름한 토마토를 썰어서 밀가루 반죽과 옥수수 가루를 묻혀 튀기는 음식이다. 바삭한 표면을 깨물면 터지는 토마토 즙은 그야말로 ‘갈바속속’의 간결한 완성이다. 설익은 야채의 짠맛이 지방의 느끼함과 어울리는 조화 또한 절묘하다. 한참을 밖에서 즐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줌마 직원이 문을 열고 우리에게 남부 사투리로 인사를 건넨다. “어디서 왔느냐? 영화는 봤느냐? 그럼 이제 들어와서 우리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맛보라”

뉴욕 FIT 교수·마이애미대 명예석좌교수

社 說

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부르며 대일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를 일본을 비판하거나 반성·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날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 ‘반인륜적인 권 범죄’ 같은 표현을 쓰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며 일본의 책임을 부각했다. 3·1절과 광복절마다 대체로 비슷한 기념사가 반복됐다. 이런 연설 뒤 인일 관계가 서먹해지고 과거사 문제가 더 꼬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곤 했다.

한국 정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정해진 패턴이었다. 국익을 위해선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일본 때리기에 동조했다. 정치권 전체가 반일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에 유화적인 정치인에겐 ‘친일파’ ‘토착 왜구’라

는 시대착오적 공격이 가해지곤 했다. 해방 후 두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 세상에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어디 있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20년에 이미 한국(4만3319달러)이 일본(4만1775달러)보다 높아졌다. 반도체·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이나 조선·배터리·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 대신자라는 ‘라인’도 네이비가 만든 것이다. ‘K웹툰’은 일본 ‘망가(만화)’의 아성을 무너트렸고, BTS와 ‘오징어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는 일본의 문화 산업을 뛰어넘었다.

이런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적개심을 터트려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감정적 반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극에 달했다. 이전 정부에서 봉합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해집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자초했고, ‘죽창기’ ‘노 재팬’ 같은 반일 선동을 부추겼다. 해방 직후 신생국에서 있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졌다.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는 결코 잊어서도, 덮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돼 관성적으로 일본을 때리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치고 전략적 선택지를 스스로 제약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제 과거로 논쟁하는 나라의 수준을 넘어섰다.



수입 869억 김제시가 추석 보너스 810억 뿌린 비결

재정 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전북 김제시가 지난 추석 때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10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본지에 보도됐다. 김제시가 한 해 자체 세수 869억원에 맞먹는 돈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이 38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세의 19%를 무조건 지자체로 내려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지자체들이 받은 지방 교부금 총액은 77조원에 달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살림을 돕기 위한 지방 교부금이 지자체장들의 선거용 매표(買票) 수단으로 남비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지자체의 신규 복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 걸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애면서 지자체의 현금 뿌리기에 날개 달아 준 격이 됐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각 지자체에서 재난 지원금 명목의 현금 살포가 경쟁적으로 펼쳐졌다. 어르신 수당, 육아 수당, 청년 수당, 해녀 수당 등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현금 복지 종류가 2000가지에 이른다.

2019년 몇몇 자치단체장이 모여 무분별한 현금 복지 경쟁을 그만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지방선거를 거치며 흐지부지됐다. 2020년 민주당 소속 한 군수는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한다면서 70세 이상 2만여 명에게 6만원짜리 쿠폰을 나눠주는 데 10억원을 썼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초등학교생에게 월 2만원씩 어린이 용돈을 주겠다는 후보까지 등장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와중에도 빚더미 중앙정부에 매년 수십 조원을 받아가는 지자체들이 세금을 평평 쓰면서 나랏빚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다. 지자체에 국세의 19%를 주도록 한 지방 교부금 규정은 지방 재정이 궁핍했던 1962년 제정됐다. 이 규정을 고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매달려 세금 낭비를 방치해왔다. 국회는 60여 년 된 낡은 법 규정을 고쳐 지자체들의 현금 살포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인사 검증 실패하고도 밀실·비밀주의 고집하는 법무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검증 실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공개를 거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지난해부터 인사 검증 절차와 내용, 대상 등을 묻는 공문을 수십 차례 보냈지만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 뒤 장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실에 송부한다’는 형식적 답변을 빼고는 모두 ‘답변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비공개 이유로 ‘검증 업무의 공정함 수행에 지장 우려’ ‘업무 노하우 유출 우려’ 등을 들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것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 묻는 질의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번 국수본부장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법무부는 작년 5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때 “정치 권력의 비밀 업무였던 인사 검증이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는 (인사 검증에 대해) 국회

와 언론에서 질문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국회와 언론이 문자 합구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검증 절차와 내용이 불투명하니 인사 실패가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인사 검증에 큰 구멍이 드러난 만큼 책임질 사람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온통 검찰 출신으로만 짜인 인사 라인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며 인사 라인 개편엔 선을 긋고 있다. 한 장관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책임지겠다는 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인사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야 잘못을 고칠 수 있다. 책임질 사람엔 책임을 묻고 검찰 일색의 인사 라인도 개편해야 한다. 막연히 시스템 문제라고 하면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법무부가 밝혀야 한다.

'자유'의 동지' 날로 먹겠다?... 이준석·천하람의 '빠꾸기' 작전'



애써 죽 썩 '빠꾸기' 주게 생겼네
이준석·천하람의 난(亂), 언제까지 되풀이되나

대한민국, 누가 주도해야 하나?

국민의힘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누가 선출될 것인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본연의 정체성을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못하느냐가, 이 선택에 달렸다.



대한민국 본연의 정체성, 그것은

[1948년의 건국 → 6.25 남침 격퇴 → 산업화 → 자유주의적 민주화 → 선진화를 이끈 [법(法) 자유 진영의 정치적·도덕적·문화적 주도권(헤게모니)]을 말한다.

이 주도권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지금, 웃기지도 않는 도전에 직면했다. 주사파의 난(亂) 때문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동지에 들어온 이준석·천하람 등의 '빠꾸기' 작전 때문이다.

천하람은 말한다. “국민의힘이 맞서야 할 대상은 민노총·민주당이 아니다. 우리 관성(慣性)이다” 무슨 뜻인가?

'빠꾸기'는 절충주의자, 얼치기 중도·중간론자... 극좌엔 그저 침묵, 자유세력에게만 핏대 올려

극좌와 싸우기보다 정통 자유 세력과 더 싸우겠다는 투다. 그의 오른쪽 앞세대(자유진영)가 왼쪽 앞세대(586)보다 훨씬 그렇게 더 잘못했기에?

'빠꾸기'들은 좌·우 양쪽 말을 적당히 '섞어찌개' '짜깁기' 한 절충론을 편다. 양다리 걸치는 수사(修辭)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역선택의 호재(好材)가 될 뿐이다.

그들은 자유주의 정당에 들어와, “당 주도권을 자유주의자들이 아닌 자기를 절충주의자들에게 물리라”고 한다. 당 옥새(玉璽)도 내놓으라고 한다.

남의 집에 들어와 집문서, 사당(祠堂), 족보를 몽땅 내놓으라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 이게 통할 소린가?

newdaily.co.kr 뉴데일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자문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주류는 어느 쪽인가? 책임당원들이 애써 쓴 죽을 그쪽에 쥐어야 하는가, 그걸 적대하는 이준석·천하람에게 쥐어야 하는가?

민노총에 양비론 하는 천하람

천하람은 말한다. “민노총이 정의롭지 않다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마저 부당해지는 건 아니다” 누가 일하는 사람들 권리마저 부당하다고 했나? 누가, 언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결단할 순간이다. 자유정신에 투철한 책임당원들의 선택인가, 국민의힘을 보쌌 해가려는 외부 세력의 역선택인가?

이준석과 천하람의 난(亂)(언론이 은근히 띄워주는)을 언제까지 되풀이 겪어야 하는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이 광고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